

# 국민의당 도당 지역위원장 선임 갈등

### 배승철·정재혁 도당 부위원장, 익산갑 낙하산 공천 반대 기자회견... 전주을 몇몇 후보들 중앙당에 등록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장 선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래 7명의 지역위원장과 8일 완주진무장 임정업 지역위원장을 결정했을 뿐 익산갑, 전주을 등 그 외 지역은 진척이 없다.

이에 도내 정가는 국민의당의 지난 4.13 총선 승리 이후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게 통론이다.

또 국민의당이 지역 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도 박찬테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갈등만 날이 갈수록 커져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배승철·정재혁 전북도당 부위

원장은 8일 익산갑 지역위원장직을 두고 낙하산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이 새 정치로 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당 중앙당 조직강화특위가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 인사를 낙하산 공천을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자행되고 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진행된 지역위원장 공모와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모 인사를 중앙당 비대위가 익산갑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새정치를 주장한 국민의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

되고 있다. 중앙당에 낙하산 공천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낙하산 밀실 공천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10만명 서명운동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를 방문할 예정인 박지원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를 지역위원장도 김호서, 엄운상, 한명규 등 몇몇 후보들이 중앙당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임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당이 후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기회를 박탈, 익산을 처럼 전략 공천실이 제기되면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 진정보다는 집안싸움 때문에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치도 타이밍이다. 기회를 놓치면 갈등이 더욱 조장될 우려가 있다. 총선 이후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상은 어정쩡하고 중앙당 구조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 최은희 도의원,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 현장 실태 점검 나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8일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중증장애인인면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니버설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승권씨가 저상버스를 직접 타보는 등 개선실태를 검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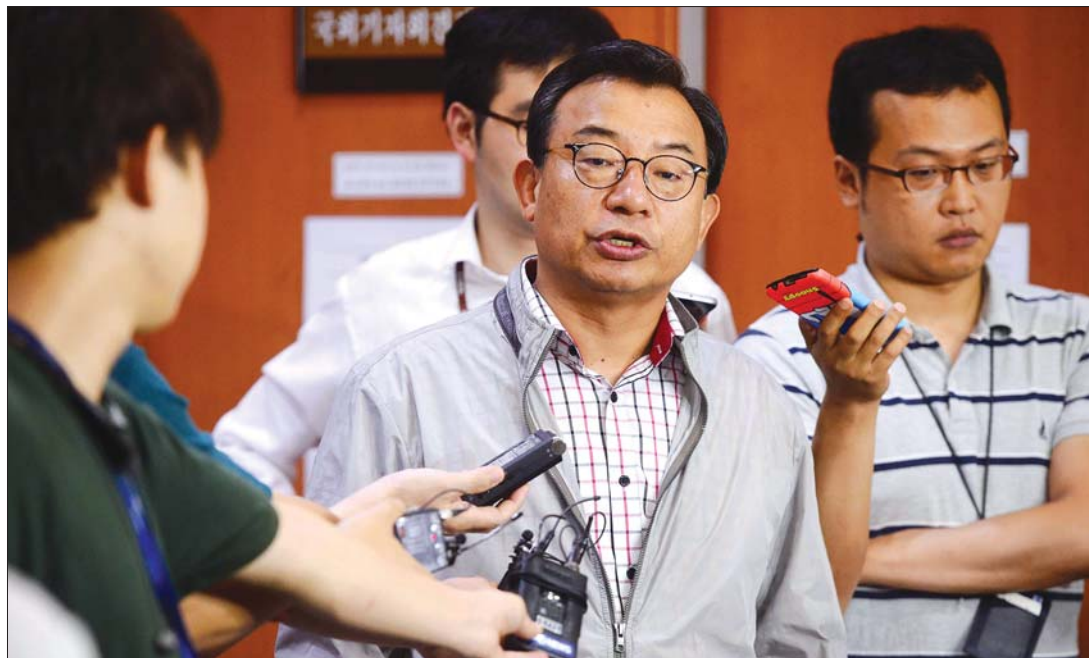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운영노선 승강장 152개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휠체어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하는 승강장개선공사와 장애인 위치표시 등 안내시설공사이다.

이번 사업에는 5년 동안 모두 15억2,000만원이 투자된다.

이날 최은희 의원은 "보차도경계서 높이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휠체어가 저상버스를 쉽게 오르내릴 수 없었다. 2m의 턱만 생겨도 휠체어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아스팔트 경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기 좋게 고쳤다고 다 끝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아직까지 전라북도 행정은 장애인을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무모차,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정류장이 되어야 한다"며 버스정류장 디자인의 한계를 꼬집었다.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현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안 공동발의

### "양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안 공동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된 기구'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 및 국무총리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의 등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수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

사, 특별수사관,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전혀 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검찰을 검증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직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오늘 제출한 법률안이 여러개의 공수처법 중 최초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도록 통과 노력을 하겠다. 정부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더민주 당권주자, '온라인 경쟁' 나서

### 온라인 당원 90% 이상 친문계 평가... 이종걸 후보측 대책 마련 골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상곤·이종걸·추미애 당대표 후보 중 주류 후보들이 앞장서 온라인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더민주에 따르면, 이번 전대에서는 온라인 당원 10만 명 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의원 추천 권한까지 가진 책임당원(당비 6회 납부)의 규모가 3만~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대표 선거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30%, 여론조사 25%를 합산해 당락을 결정한다는 점에 서, 대의원 중에서 온라인 당원이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지면 기존의 조직표는 그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이런 온라인 당원의 90% 이상을 친문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류 후보들의 SNS 활동도 친문계인 온라인 10만 당원의 표심을 사실상 겨냥한 것인데, 비주류 이종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최약체로 폄하했으나 지난 예비경선에서 이변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를 호소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 또한 기존에 운영했던 SNS 계정을 중심으로 남연과의 결혼 후일담 등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하는 등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비주류 이종걸 후보는 SNS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온라인 당원들의 폭발적 지지는 없을 것이라 판단, 캠프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온라인) 당원들 중에서 저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SNS 채널을 좀 더 활발하게 작동시켜 토론을 하면서 저에 대해 자세히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이춘석 의원, 빈집 특별법 발의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공동적 과제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빈집은 방치될 경우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일본은 물론, 이미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법안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재정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붕괴우려나 치안위협 등 공익상 현저히 유해할 경우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법이 통과될 경우 원도심 내 빈집문제를 겪고 있는 익산은 물론이고 유사한 전국 지자체에서도 빈집의 적극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해져 원도심 활성화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한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박지원 비대위원장, 9~10일 전북 방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10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 민심을 청취하고 스킵심 강화에 나선다.

먼저 박 비대위원장은 9일에는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소통과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몸소 체험한다.

이어 10일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군산으로 이동, 농축산어업인 워남소리 1차 간담회 및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갖는다.

/신광영 기자

## 이용호 의원, 재난안전 특교세 13억 확보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은 순창군 '팔왕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남원시 '어현동 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 임실군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정비사업' 등 지역 구 재난안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순창 '팔왕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의 경우 5억원을 확보했다. 팔왕교는 지역 문화에 근거에 위치해 있으나, 설치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다.

남원 '어현동 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은 4억원을 확보했다. 독도랑골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침수가 발생해왔던 곳이다. 배수도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으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정비사업'도 4억원을 확보했다. 주거지 근처 사면붕괴가 우려됐었던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돼 왔던 남원·임실·순창은 특히 노후 시설이 많아 재난의 위험이 크고, 주민 불안요소가 되어 왔다"며 "안전행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현안사업 특교세에 이어 확보한 이번 재난안전특교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여질지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원·임실·순창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3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남원시 '노안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임실군 '임실~진안 상수도 연계 급수사업', 순창군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 확포장' 등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자부 특교세 총 22억원을 확보하는 등 20대 국회 개원 후 2달여만에 총 3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신광영 기자

## "외교마찰 서슴지 않는 정부·여당 행태 비애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세를 퍼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정 운영의 돌피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교마찰도 서슴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비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자신들의 의견에 찬성하면 애국과 국익이 되고, 반대하면 매국·사대라는 안하무인식 선동정치로 인해 다치는 것은 국민의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